

[별첨1] <6.3지방선거, 성평등한 기후정의에 투표한다> 한국YWCA 성명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한 기후정의, 이제 지역정치가 응답하라!

우리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원한다.

정치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만들 책무가 있다. 오는 6.3 지방선거는 시민들이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지역 정치인과 정책을 선택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오늘날 지역정치의 현실은 중앙 정치의 대리전 양상속에서 정책 경쟁은 실종되었고, 중요한 지역 의제는 증발했다. 그 사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기후위기는 더이상 막연한 경고가 아니다. 매년 반복되는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생태계 붕괴로 이어지는 실존적 위협이다. 지구온도 상승폭이 연평균 1.5도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는 지금,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마지막 4년의 골든타임이 이번 지방정부의 임기에 달려 있다.

우리는 금번 6.3 지방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과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녹색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라. 에너지 전환과 녹색 경제로의 모든 전환 과정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평등한 교육과 일자리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노동 구조를 수립하라.

하나.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누구나 안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와 안전망을 구축하라. 예방, 조치, 복구의 전 과정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기후위기로 심화된 돌봄의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돌봄민주주의’에

기반한 지역 차원의 통합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기후위기대응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청년, 기후 위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라. 기후정책의 계획과 실행의 전 과정에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시민의 경험과 목소리가 정책에 온전히 담길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하라.

하나. 토건 중심의 개발 공약이 아닌, 생태적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지역 생존과 상생 정책을 이행하라.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먹거리·에너지·교통·주거 등 생활 정책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성평등한 전환을 지역에서부터 이행하라.

2026년 6월 3일, 우리는 모두를 위한 기후정의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역의 필요와 특수성에 기반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을 선택할 것이며, 그 정책을 실행할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당선 이후에도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는지 연대로 지켜보며 투표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국YWCA는 “이제 생명을 택하라”는 사명 아래 정의, 평화, 생명을 지키는 행동과 연대의 104년 역사를 이어왔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기후정의의 나무가 지역에서부터 자라고 모두의 그늘이 될 그 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며 멈춤없이 나아갈 것이다.

2026년 4월 28일

YWCA 전국회장단 연수 참가자 일동